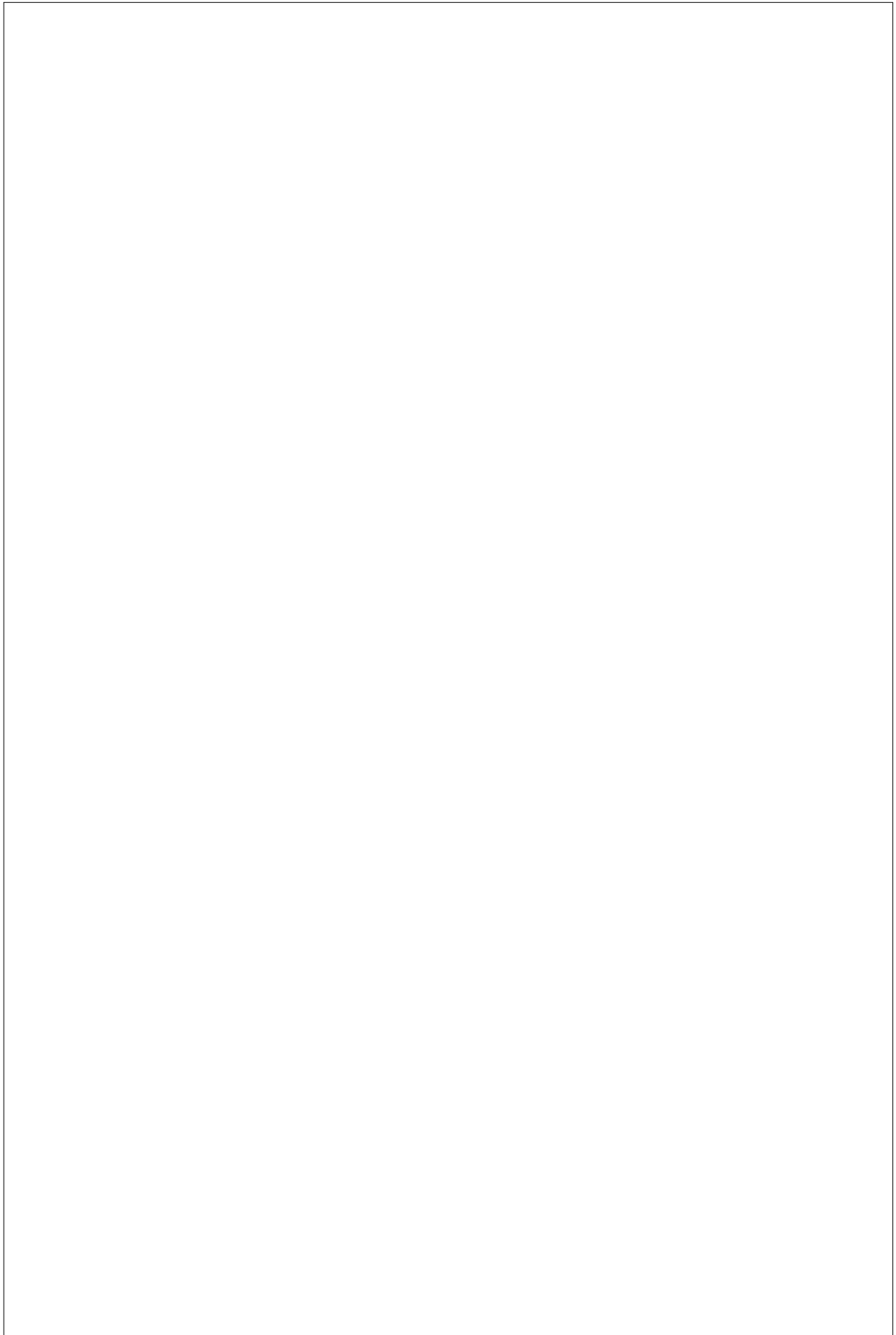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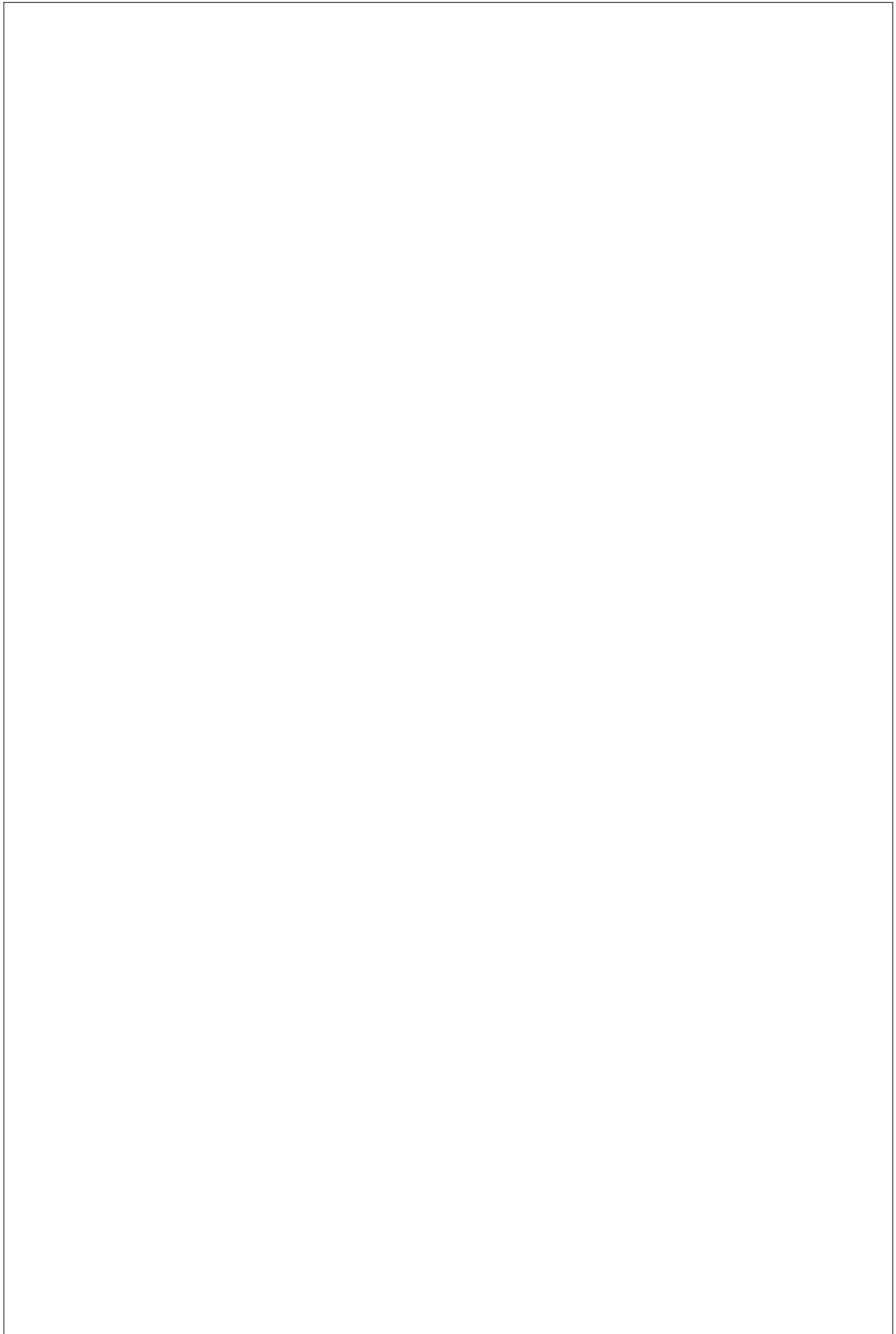
사회보장사업 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일 시	2015년 10월 22일(목) 10시 ~12시 30분
장 소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5층)
주 관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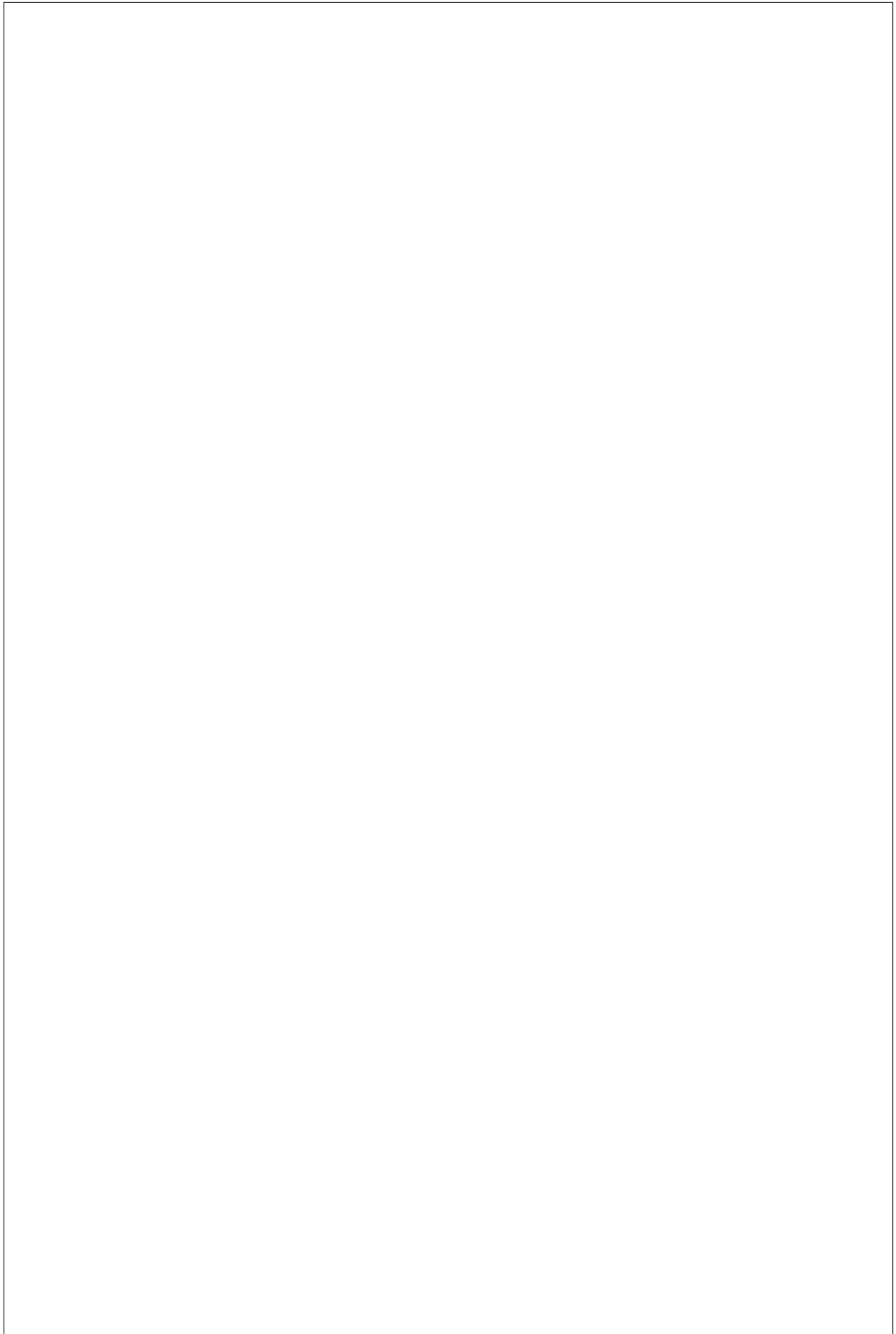
진행 일정

시 간	프로그램
사회 : 조항입(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10:00~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 국민의례 ○ 인사말 : 박영수(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구자권(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현채(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유병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최명진(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대표) ○ 일정 안내
<1부> 사회보장사업 정비로 인한 피해자 증언대회	
10:10~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흥기(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 오선진(덕암영아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보장사업 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좌장 :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0:25~11:00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1:00~11:50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동선(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 ○ 박정현(대전광역시의원) ○ 박흥기(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 윤혜주(대전광역시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사무처장) ○ 김구(대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1:50~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자 료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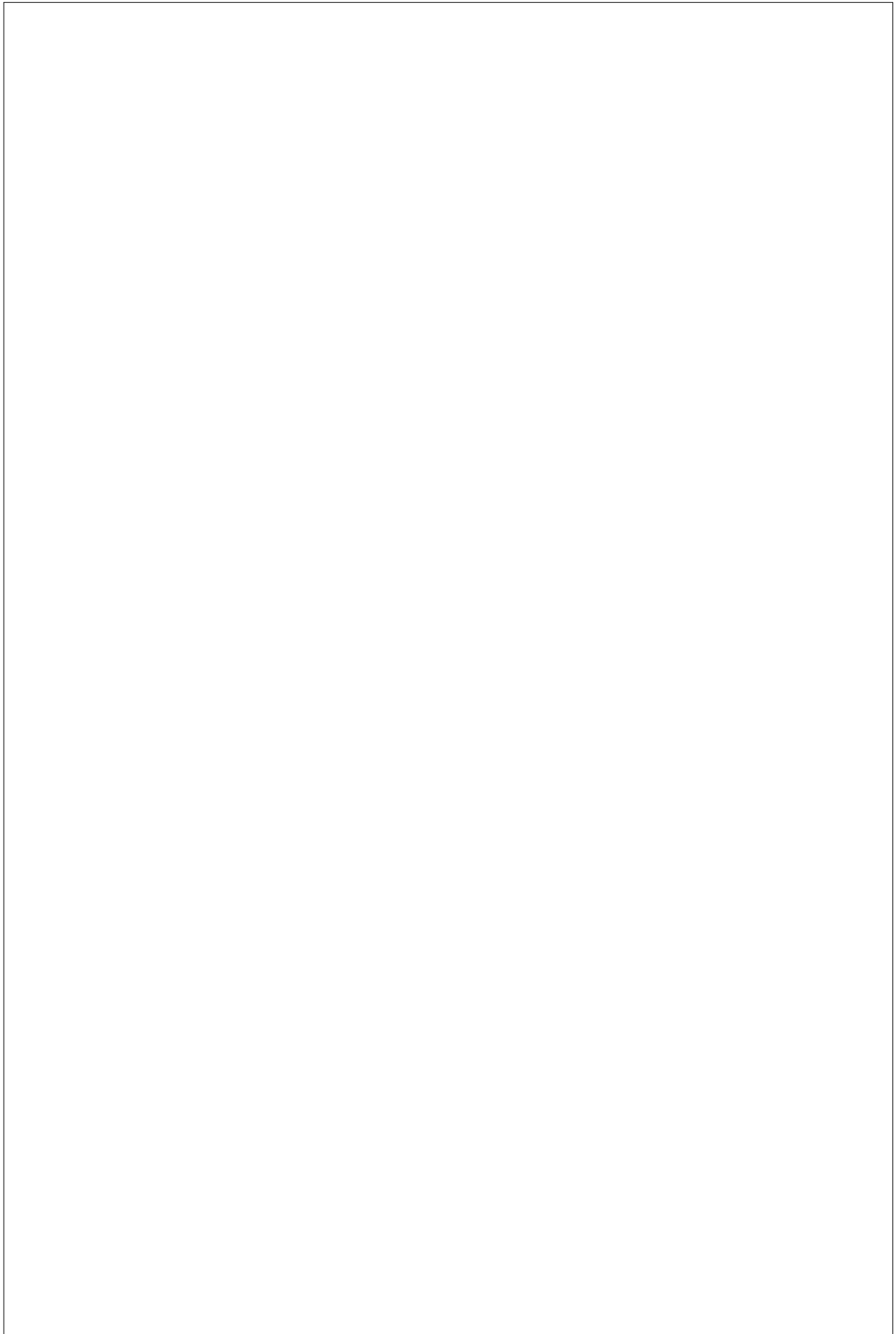
발제.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7
토론1. 김동선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	51
토론2. 윤혜주 / 대전광역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사무처장	65
토론3. 박흥기 /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토론4. 박정현 / 대전광역시의원	
토론5. 김 구 / 대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¹⁾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행동하는복지연합 공동대표
이 태 수

1. 박근혜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추진과정과 배경

1) 「정비지침」 추진 과정

- 최근 정부는 이른 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박근혜정부는 제10회 사회보장위원회('15.08.11)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15.08.13)(이하 “「정비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동 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토록 함.
- 정부가 발표한 정비대상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사업(6.5조원)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고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 9,997억원(사업 수 비중 25.4%, 예산 비중 15.4%)임.
-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율 추진과 전혀 다름.
- 「정비지침」에 따르면, 시·도별 조치필요 사항이라 하여 17개 시·도로 하여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케 하고 있으며
- 중앙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별 추진단(17개),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토록 하고
-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재부·복지부·행자부 차관을 간사로 하는 복지재정효율화 중앙대책단을 통한 점점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음.

1) 본 글은 남찬섭,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비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설명자료와 이재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이대로 좋은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긴급토론회(2015. 6. 12)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글임을 밝히는 바임.

○「정비조치」은 9월 25일까지 시·도별 정비계획안 제출, 10월 초 시·도별 정비계획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1월 27일 정비결과 1차 제출, 12월 지자체 정비결과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2016년 1월 15일 정비결과 2차 제출 등 대단히 급박하게 진행될 예정임.

- 더욱이 11월 27일이 기한으로 되어 있는 정비결과 1차 제출 시 지자체는 9월 25일의 정비계획안에 따라 조정된 2016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정비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내년 1월 15일이 기한으로 되어 있는 정비결과 2차 제출 시에는 정비결과가 반영되고 지방의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정비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 정부는 지자체의 정비결과를 복지부, 행자부 등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평가(지역복지사업평가(복), 지자체 합동평가(행))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이후 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자치부는 9. 3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안 제12조 제1항 제9호)을 신설하려 함.

- 안 제1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
- 여기서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은 그 악명 높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조항임.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이 추가되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심의·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조정을 말하며

이 심의·조정 대상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급여 및 비용부담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있음.

- 결국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심의·조정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채찍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당연히 이번 「정비조치」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사회보장위원회에 제공하려는 것임.

2) 「정비조치」의 배경

○ 이러한 「정비조치」가 나온 배경에 대해 정부 스스로는 해당 문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 즉, 정부에 의하면, 지자체 도입 20년간 지방제정에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확대되어 2015년 지자체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이 27.8%에 달하고 있지만 투입대비 효과성 등 내실화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중앙정부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사업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현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몇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첫째, ‘증세없는 복지확대’의 기조를 천명한 박근혜정부로서는 형용모순과 같은 이 기조에 얽매어 복지확대에 별다른 돌파구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예산에서 보듯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의 지방정부에 전이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때 지방정부 스스로의 복지자체사업 예산을 줄여 수용 여지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 둘째, 현 정부는 복지예산의 구조조정과 효율화라는 기조를 일찍부터 수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완구 전국무총리나 최경환부총리를 통해 올 초부터 이런 언급은 지속되어 왔음. 정부의 핵심인사들의 이런 기조가 지방자치에 대한 미숙한 인식과 함께 이번과 같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음.

2. 대상 사업 현황 및 선정 기준의 문제점

1) 유사·정비사업 현황

-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은 1,496개로 17개 광역시 평균 88개 사업임.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 244개, 경상남도 162개, 전라남도 128개, 서울시 124개, 경상북도 118개, 충청남도 113개, 강원도 109, 충청북도 96개, 전라북도 91개 등(<표 2>).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대상자(이용자)는 전체 6,458,825명. 사업대상자가 1백만명이 넘는 지역은 경기 1,720,026명으로 가장 많고, 50만명 이상 지역은 인천 974,532명, 서울 876,569명, 대구 652,512명, 경북 584,938명임. 그리고 20만명 이상 지역은 경남 297,403명, 강원 270,059명, 10만명 이상 지역은 충남 198,164명, 충북 189,824명, 대전 168,875명, 광주 137,801명, 전북 135,363명, 전남 115,654명이며 10만명 미만인 지역은 부산 70,094명, 울산 38,104명, 제주 20,927명, 세종 7,980명.

<표 1> 지방자치단체별 유사·중복사업 현황

지자체명	사업수				예산액(백만원)				사업 대상자
	기초	광역	매칭 (시도)	계	기초	광역	매칭 (시도)	계	
강원	86	3	20	109	11,544	133	32,934	44,611	270,059
경기	196	-	48	244	35,095	-	281,759	316,854	1,720,026
경남	121	19	22	162	27,975	34,314	43,195	105,484	297,403
경북	81	1	36	118	13,947	439	22,953	37,339	584,938
광주	11	2	17	30	337	4,008	14,049	18,394	137,801
대구	29	8	19	56	3,324	1,148	18,279	22,751	652,512
대전	7	3	16	26	167	241	20,057	20,465	168,875
부산	41	1	15	57	7,295	10	27,653	34,958	70,094
서울	118	1	5	124	22,736	9,734	22,866	55,336	876,569
울산	17	9	19	45	2,345	1,783	18,662	22,790	38,104
인천	25	5	23	53	3,071	5,043	70,177	78,291	974,532
전남	113	5	10	128	15,352	444	49,768	65,564	115,654
전북	74	8	9	91	11,273	19,545	14,494	45,312	135,363
제주	26	4	5	35	4,098	577	5,101	9,776	20,927
충남	85	3	25	113	14,760	573	38,318	53,651	198,164
충북	72	6	18	96	10,729	2,396	52,011	65,136	189,824
세종	-	9	-	9	-	3,038	-	3,038	7,980
총계	1,102	87	307	1,496	184,048	83,426	732,276	999,750	6,450,845

- 대전 지역은 모두 26개 사업, 총 204억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임. 구체적으로는 시청 19개 사업, 동구 2개, 유성구 4개, 중구 1개 사업이 각각 해당됨.
(세부 사업명 및 해당 예산액은 별첨 자료 참조)
- 26개 사업에 포함된 대전 시민은 모두 16만 8천명으로 추산됨.
- 한편 사회복지대상자별 유사·중복사업 현황(<표 2>)을 보면 저소득자 지원 466개, 노인복지 230개, 장애인복지 230개, 복지시설지원 160개, 지역주민지원 156개, 다문화/북한이탈주민지원 112개, 아동청소년복지 96개, 여성복지 46개임.

<표 2> 사회복지대상자별 유사·중복사업 현황

대상별	사업수	예산	사업내역
노인복지	230개	117,298	장수수당, 노인일자리 사업, 집수리, 조손가정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요양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복지	230개	181,365	장애인 수당, 여성장애인 출산, 육아지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수화통역,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등
아동청소년 복지	96개	13,840	요보호아동 의료비 지원,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소년소녀가정 학원비 지원, 요보호아동청소년 장학금지원 등
저소득자 지원	466개	262,761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노숙인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지원, 저소득가정 냉,난방비 지원 등
다문화/북한 이탈주민 지원	112개	28,089	결혼이민자 교육,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교육지원,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정자녀 방문교육 등
여성복지	46개	5,797	여성일자리사업, 여성긴급전화 운영,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복지시설 지원	160개	253,655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인건비 지원, 복지센터 지원 등
지역주민 지원	156개	136,945	주거환경개선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장난감 대여, 보육료 차액지원, 입양가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의사상자 지원, 이재민 구호 등
계	1,496개	999,750	

2)정비대상사업군 및 정비기준

- 먼저 각 지자체에 통보한 정비지침은 정비대상 사업을 4가지 사업군으로 분류하고 각 사업군별로 정비유형을 정하고 있음(<표 3> 참조). 또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별로 정비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 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정비 사업을 정하고 있음(<표 4>).
- 사회보험제도와 관련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하고,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경우 제도의 통일성, 지역간 형평성, 동일수급자를 위한 유사 성격의 급여는 원칙으로 정비,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효과가 저조한 사업 등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음.

<표 3>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군 및 정비유형

정비기준	정비 유형	사업 수	예산 (억원)	유사중복 사업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 체		1,496	9,997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폐지 권고	163	219	.국민건강보험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일부지원 .저소득계층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74	393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 (맞춤형 급여제도)	사업내용 변경, 타사업과 통폐합	191	768	.교육급여(교육부)	.저소득층 교육지원 .보호아동 중고등학생 참고서지원 등
				.주거급여(국토부)	.사랑의 집짓기사업 .희망의집 임대주택 등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1,068	8,617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사업	.노인 목욕서비스 .경로워생수당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주여성 한글교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긴급복지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자료 : 사회보장위원회, 2015

<표 4> 유사·중복 사업 정비 기준

구분	정비기준	공통기준	
사회 보험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		
공공 부조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 ('15.7)에 따라 기존 지자체 사업과의 상호보 완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정비 추진 권고	제도의 통일성, 지역간 형평성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부적합하거나, 지역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 하는 추가급여 지급 및 대상자 확대는 원칙적으로 정비
		유사·중복, 누락,편중	■동일 수급자를 위한 유사 성격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정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기존 전달체계를 우선 활용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사회 서비스	■사회서비스 급여 대상자 확대는 가능 ■공급기관보다는 수요자지향 서비스 권고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금을 차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충	지자체별 여건	■지자체별 재정 상황, 인구 구조 등 지방자치제도 실시 20년간 변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정비
		비용/효과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정비 권고
		기 타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혜자의 근로의욕이나 자활의지 제고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자체 자체 점검을 통해 급여/서비스 방식 정비 권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개념으로 전환 검토

자료 : 사회보장위원회, 2015

3) 기준별 사업 내용과 문제점

○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함. 아울러 이 기준이 가지고 있는 맹점 또한 제시코자 함.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중앙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권고하고 있음. 지자체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출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이 해당.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중복이유로 지자체의 노인장기요양본인부담금 일부지원사업과 저소득층계층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폐지권고에 해당 이에 대해 정부는 본인부담금 일부지원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 등으로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표 5>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현황

시도	시군구	사업명	사업목적 세부분류	대상	내용	예산 (백만원)
서울	강동구	노인복지 개선 (저소득노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건강 보험료 지원	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인 차상위 노인, 노인 외 장기요양주인 중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 주인,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20
경기	구리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월 1만1천원 미만인 65세 이상노인,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세대	보험료 전액	6
전북	군산시	저소득계층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	군산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월 건강 보험료(3개월 평균) 1만원미만세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기타의료급여 수급자제외	장기요양보 험 본인부담 금 납부액의 50%이내 지 원 (월 최대지 원액 5만원)	65

(반박)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자체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그 대상이 저소득층이며, 지원수준도 지자체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과 중복되지 않음(지역, 계층, 지원수준 차이).
-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건강보험 이용의 장애가 발생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다. 본인부담금제도 취지가 의료서비스 이용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의 통제수단이 되고 있음. 불완전한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선택적으로 일부 대상자에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지원하는 것을 불가하는 것 자체가 사회연대성을 훼손하는 것임.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급여도 폐지를 권고하는 사업군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수수당 등의 경우 기초연금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판단하고 있음.

<표 6>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현황

시 도	시군 구	사업명	사업목적 세부분류	대상	내용	예산 (백만원)
충 남	천안 시	장수수당 지원	장수수당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 85세이상 노인	85세이상: 월 3만원 100세이상: 월 10만원	720
충 북	영동 군	장수수당 지급	장수수당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 80세이상 노인	월 3만원	1,188
세 종		사회활동 장려금	장수수당	관내 거주하는 85세 이상 어르신	월 5만원	2,100

(반박)

- 사실 장수수당은 지자체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도입시행하고 있음.
경로효친의식의 고양과 인구유지 및 유입정책(인구정책)을 위한 소득지원 등이다.
또한 심각한 노인빈곤율에 비해 여전히 국민연금급여자는 적고, 기초연금 수준도 낮은 상황에서 장수수당의 유용성은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음.

- 따라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도입취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급여라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부당.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맞춤형 급여제도)

-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사업군으로 지자체의 저소득층 교육지원, 보호아동 중고등 학생 참고서 지원 등이 교육부의 교육급여와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내용 변경하거나 타사업과 통폐합하라는 것임. 또한 지자체의 사랑의 집짓기사업 등이 국토부의 주거 급여와 중복됨을 지적하고 있음.

<표 7>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 현황

시 도	시군 구	사업명	사업목적 세부분류	대상	내용	예산 (백만원)
전 북	정읍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	관내국민기초생활수급 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중 성적 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봉사활동 우수자	중학생 연 2회 20만원/인, 고등학생 연 2회 40만원/인	11
울 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학비 (등록금- 입학금)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진학자	500만원/인	140
전 남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시설 개선	자가 주택소유자 등에 해당하는 70세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으로 차상위계층 120% 이내의 거동불편자등 (기초수급자 제외)	수세식화장실, 입식부엌, 양변기 설치,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상하수도 및 담장 수선 등: 300만원/개소	660

(반박)

-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중복되는지 여부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과 여건의 차이와 주민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영하여 지자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역복지를 무시하는 조치임.

- ⑤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군으로 지자체의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중복됨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타사업과 통폐합하라는 것임.
 -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목욕서비스, 경로위생수당이 복지부의 노인돌봄 사업과 중복, 이주여성 한글교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중복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긴급지원이 복지부의 긴급지원과 중복된다는 것임.

<표 8>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현황

시도	시군구	사업명	사업목적 세부분류	대상	내용	예산 (백만원)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 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1등급 최중증	활동지원1등급 최중증(독거및취약): 월 192시간 활동지원1등급 (최중증 외): 월 20시간	500
전남	나주시	이동통합 서비스사업 (이동목욕 사업 및 재가 복지사업)	위생지원	60세 이상 일반 노인 및 거동 불편 노인	이동목욕운영, 재가복지사업 (유급봉사원 인건비지원)	92
충남	공주시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다문화/ 새터민 정착지원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자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교육지원 내용: 다문화가정을 위한 학교 운영, 다사랑 봉사단 운영,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이해교육 연수 운영 등	20
경기	과천시	저소득 틈새지원	기급구호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70미만인자 총재산 7,750만원 이하	난방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료	4

(반박)

-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자체 사업이야 말로 지역현실에 기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고 틈새를 채우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섬세한 지자체 사업이야 말로 지방정부의 고유의 역할인 것임. 이러한 보충적 성격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의 당연 사업으로 오히려 권장해야 함.

3. 「정비조치」가 지닌 법률적 문제점의 문제점과 정부 근거의 검토

1) 정부가 제시한 근거의 부적합성

○ 정비지침에 의하면,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 근거 법률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와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에 두고 있음(<표 9> 참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1항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제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이며 여기서 제7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부담이며 제9호는 사회보장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에 대한 것임.
- 또한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9>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 근거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1.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관련 주요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 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근거법률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사회보장사업법과 관련해서는

- 첫째,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서 열거한 내용은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중앙정부와 개별 지자체 간의 개별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특별규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규정²⁾임. 이 규정을 이번 정비방안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이 적용되는 시간적인 한계는 동 조항이 발효된 2013년 1월 27일부터이고 그 이전에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는 적용할 수 없음.
- 둘째, 제7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안이 지자체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분담에 해당되지 않음.
- 셋째, 제9호는 사회보장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인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전달체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동법 제2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대해 접근성 제고와 전달체계 운영상의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하고 민간부분과의 연계노력을 규정³⁾하고 있을 뿐 사회보장사업의 유사 중복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다음으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는

-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함.

2) 제26조 (협의 및 조정)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3) 제29조 (사회보장 전달체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감독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언, 권고, 지도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지자체가 헌법 및 자치권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입법권 행사에 따른 조례에 근거한 복지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라는 내용에 관하여는 자치사무의 본질적인 사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국가의 감독권은 대부분 위임사무에 국한되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범위는 위법성 감사에 한정되며, 이를 넘어서 포괄적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⁴⁾

2) 지방자치에 대한 위법성의 근거

- 이번 「정비조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여타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임.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1항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1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임. 그 구체적인 법 조항은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음.

4) 헌법재판소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범위를 법령위반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데, 감사개시에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어디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은 합목적성 감사보다는 합법성 감독을 지향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5.28. 2006헌라6

<표 10>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근거 법률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4조
<p>제117조 관련판례 관련문헌</p> <p>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p>	<p>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p> <p>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p> <p>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p> <p>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p> <p>라. 노인·아동·심신 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p> <p>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p> <p>바~차. <생략></p>	<p>제22조(평생안전망의 구축 운영)</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p> <p>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4조(소득 보장)</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조 (정의)</p> <p>1~4. <생략></p> <p>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p> <p>제4조 (기본원칙)</p> <p>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첫째,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의 책임이 지자체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 둘째,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자치사무와 제2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무 중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이에 대한 시·군·구의 종류별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자치사무에 해당
- 셋째, 소위 박근혜법으로 불리는 사회보장기본법⁵⁾ 제2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 대해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서비스 시책 및 소득보장제도 마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넷째, 박근혜정부에서 제정한 사회보장급여법⁶⁾에서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보장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급여의 충분성과 적절성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급여의 제공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5)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대통령이 의원시절에 동료의원 123인과 함께 발의한 것으로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형 생활보장형 복지국가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

6)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2014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 「정비조치」에 대한 시민사회복지계의 대응 전략

- 이제까지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이번 「정비조치」는 주민의 복지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명백히 반복지적, 반법률적 조치에 해당함. 그 방식도 지자체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 하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렇다면 이런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국면을 타파하고 정상적인 상태를 복원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 먼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현 국면의 심각성과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와 이에 근거한 노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함.
 - 가장 먼저 행할 수 있는 것은 권한쟁의 신청이라할 것임.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 침해된 것을 시정하는 하나의 구제수단으로 법률이 부여한 것이 바로 권한쟁의 신청임. 이미 서울 16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22개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권한쟁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있음.
 - 또한 지자체는 「정비조치」에 의해 시달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예산 제외라는 주문을 행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임. 지자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사회의 주문과 감시, 의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평소 복지예산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기조를 갖고 있었던 바, 차제에 이를 기회로 복지예산 축소를 행하는데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바임.
- 지역주민의 복지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복지단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미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가 꾸려져 100여개 이상의 단체들이 가입한 상태에서 성명서 발표를 비롯하여 공청회 개최와 서명작업, 항의방문 등을 행하기 시작하였음.
 - 대전, 인천을 비롯하여 여러 시도에서 지역단위의 공동대책위를 꾸려 위에서 말한 바대로 지자체 스스로 이러한 국면에서 자신들이 행해야할 지방자치의 수호와 주민 복지의 옹호라는 역할을 행하도록 압박하고 추동하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전국적 단위와 지역적 단위 양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시정을 요하거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복지사업을 실제 행하는 각 시설이나 관련 협회에서도 이러한 국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 적극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과 같이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타격이 있는 영역을 포함하여, 자신들이 사업을 행하고 있는 지역과 집단에 있어 복지급여가 축소되고 복지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좌시하면 차후 다른 사업과 영역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간섭과 축소조치가 확산될 것임을 생각해야 함.
 - 이런 점에서 다른 시민단체 및 협회 등과 연대하여 이 국면을 정상화하는 데에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임.
-
- 결국 이번 「정비조치」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복지에 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이 각기 어떠해야 하며 그들 간의 관계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음.
 - 그런 가운데 지역 주민의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가 이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스레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음.

별첨1.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공문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

1.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15.8.11) 관련입니다.

2. 위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계획(실적)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1부.
2. 시·도별 정비 추진단 구성현황 작성 양식 1부.
3. 정비 대상 사업 목록 및 정비계획(실적) 작성 양식 1부(별도송부).
4. 절감 재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작성 양식 1부(별도 송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시장, 부산광역시시장, 대구광역시시장, 인천광역시시장, 광주광역시시장, 대전광역시시장, 울산광역시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보장조정과장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협조자

시행 사회보장조정과-659 (2015.08.13.) 접수 복지정책과-4009 (2015.8.17.)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http://mw.go.kr
전화 02-6020-3335 /전송 504-4202-3955 /ssw73@korea.kr / 공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2015. 8.

사 회 보 장 위 원 회 사 무 국

- 목 차 -

I . 추진개요	1
II . 유사 · 중복사업 정비지침	3
III . 추진일정	10
VI . 행정사항	11

I.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현황) 그 간 사회보장사업은 양적·질적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 증가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앙정부) 연금·건강 등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 분야도 대폭 확충
 - * '15년 정부 총지출 375.4조원 중 복지분야는 115.7조원(30.8%)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7.0%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를 상회
 - (지방자치단체) 자치제 도입 20년간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 * '15년도 지자체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 27.8%('15년 행정자치통계연보)
- (문제점) 지속적인 복지사업 확충으로 복지제도의 외형적 틀 완성 등 성과도 있었지만 투입 대비 효과성 등 내실화는 미흡
 -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이 부처별로 시행되어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사업간 전달체계의 연계성 미흡
 -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도 다수 발생
- (개선방향)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 효율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 필요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를 추진
 -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

2

그 간의 경과

- 사회보장위원회는 '13년 이후 사회보장사업간 유사·중복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추진
 - 기존 사회보장사업은 유사·중복성 검토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 신규 사회보장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통해 유사·중복 문제를 사전에 차단
- 기존 사회보장사업과 관련, 우선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하여 360개 사업을 297개 사업으로 정비(△63개)
 - 사회보장사업(360개)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유사·중복 후보 사업군 발굴('14.11~'15.2)
 -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비 필요사업 선정(20개 사업군, 48개 사업*) 하여 정비 추진('15.2~'15.5)

* (부처간) 37개 사업, (복지부내) 11개 사업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 정비 추진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15.4~7, 복지부·보사연)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시·도 사업, 시·도/시·군·구 매칭사업, 시·군·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
 - 그 결과, 전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은 5,891개 사업으로 파악

<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 근거 법률 >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 제7호 및 제9호

- 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사회보장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 할 수 있다

Ⅱ.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침

기 본 방 향

-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되, 유사·중복성이 명확한 사업 등은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 추진
 - * (구성) 사보위 사무국, 17개 시·도(단장: 부단체장), 관련부처, 보사연 등
- ◇ 금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 * 동 재원을 활용한 사회보장사업의 신설·변경 협의절차 간소화

1

정비 방향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되, 유사·중복성이 명확한 사업 등은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 추진
 - (통·폐합)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 중앙정부 신규사업(맞춤형 복지)과 중복사업 등
 - (효율화)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 종류, 수준, 전달체계 등 정비
- 금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 중앙-지방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 추진
 - * 협의회 지원을 위해 보사연 주관으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시·도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비결과를 사후검증

2

정비 대상

□ '15.4~7월 실태조사(복지부·보사연) 결과 파악된, 지자체에서 국고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 (유사·중복) 연구용역 결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

* 정비대상 사업 목록은 별도 송부(보건사회연구원), 동 목록 참조·정비 추진

○ (자체발굴) 지자체에서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3

정비대상 사업군

① 사회보험 관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163개 사업, 219억원)

-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74개 사업, 393억)

- 중앙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기초연금)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유사 성격의 현금성 급여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맞춤형 복지)과 중복 되는 사업(191개 사업, 768억원)

- 기초수급자 지원대책이 맞춤형 급여체제로 변경('15.7월)됨에 따라 동 제도와 중복 될 여지가 있는 지자체 사업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의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1,068개 사업, 8,617억원)

◇ (보훈수당)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훈수당 등은 지자체별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금번 정비대상에서 제외함.

<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군 >

정비기준	사업수	예산 (억원)	유사중복 사업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 체	1,496	9,997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163	219	.국민건강보험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일부지원 .저소득계층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74	393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 (맞춤형 급여제도)	191	768	.교육급여(교육부)	.저소득층 교육지원 .보호아동 중고등학생 참고서지원 등
			.주거급여(국토부)	.사랑의 집짓기사업 .희망의집 임대주택 등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1,068	8,617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사업	.노인 목욕서비스 .경로위생수당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주여성 한글교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긴급복지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4

유사·중복 정비기준

-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별로 정비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 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정비

구 분	정비기준	공통기준	
사회보험	■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		
공공부조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15.7)에 따라 기존 지자체 사업과의 상호보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추진 권고	제도의 통일성, 지역간 형평성	■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부적합하거나, 지역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 하는 추가급여 지급 및 대상자 확대는 원칙적으로 정비
		유사·중복, 누락, 편중	■ 동일 수급자를 위한 유사 성격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정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 기존 전달체계를 우선 활용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강구
		지자체별 여건	■ 지자체별 재정 상황, 인구 구조 등 지방자치제도 실시 20년간 변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정비
사회 서비스	■ 사회서비스 급여 대상자 확대는 가능 ■ 공급기관보다는 수요자 지향 서비스 권고 ■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차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충	비용/효과	■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정비 권고
		기 타	■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혜자의 근로의욕이나 자활의지 제고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은 지자체 자체 점검을 통해 급여/서비스 방식 정비 권고 ■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개념으로 전환 검토

5

시·도별 조치필요 사항

① 추진단 구성 및 정비 계획수립

- 시·도별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단(단장 : 부단체장)*을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

* 사보위 사무국, 시·도별 추진단,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업을 통해 정비 추진

- 추진단 책임하에 지자체에 시달된 정비대상 사업 등을 검토한 뒤 시·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보위 사무국에 제출('15.9.25)

- 각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정비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방향, 대상사업 선정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의 자문그룹에 컨설팅 등 요청

* 정비대상 사업과 정비계획 제출양식은 시도별로 별도 송부예정(보사연)

< 사업군별 정비유형 >

사 업 군	정비유형	비고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폐지 권고	즉시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 추진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 (맞춤형 급여제도)	사업내용 변경, 타사업과 통폐합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⑤ 자체발굴 사업	폐지, 변경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추진

* (예시) 장수수당 지급기준을 연령이 아닌 출생연도로 변경

② 정비추진

- 마련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로 '16년 예산안 반영, 조례 개정 등 정비추진

- * 단계적 폐지사업은 정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

-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협업 실시(보사연 주관)

- (설명회) 9월초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도와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비방향, 정비요령 등 설명예정
 - (간담회) 9월말~10월 중순 시·도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비추진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의 해소를 위해 컨설팅 등 제공예정

③ 정비결과 제출

- 제출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사보위 사무국에 제출('15.11.27)
- (1차)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15.11.27)
 - (2차) 지방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16.1.15)
- * 결과제출 양식은 9.27일까지 제출한 추진계획 양식과 동일

④ 신규사업 발굴

-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함께, 절감된 재원을 사각지대 발굴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재투자 권장
-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개선한 타 지자체 사례 참고를 위해 보사연에 설치될 사회보장정비협의회 자문그룹과 협의 요망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의 신설·변경 협의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
- * 정비계획 제출시 신규사업 리스트도 제출(정비계획 양식과 함께 별도송부 예정)

5 결과점검 및 향후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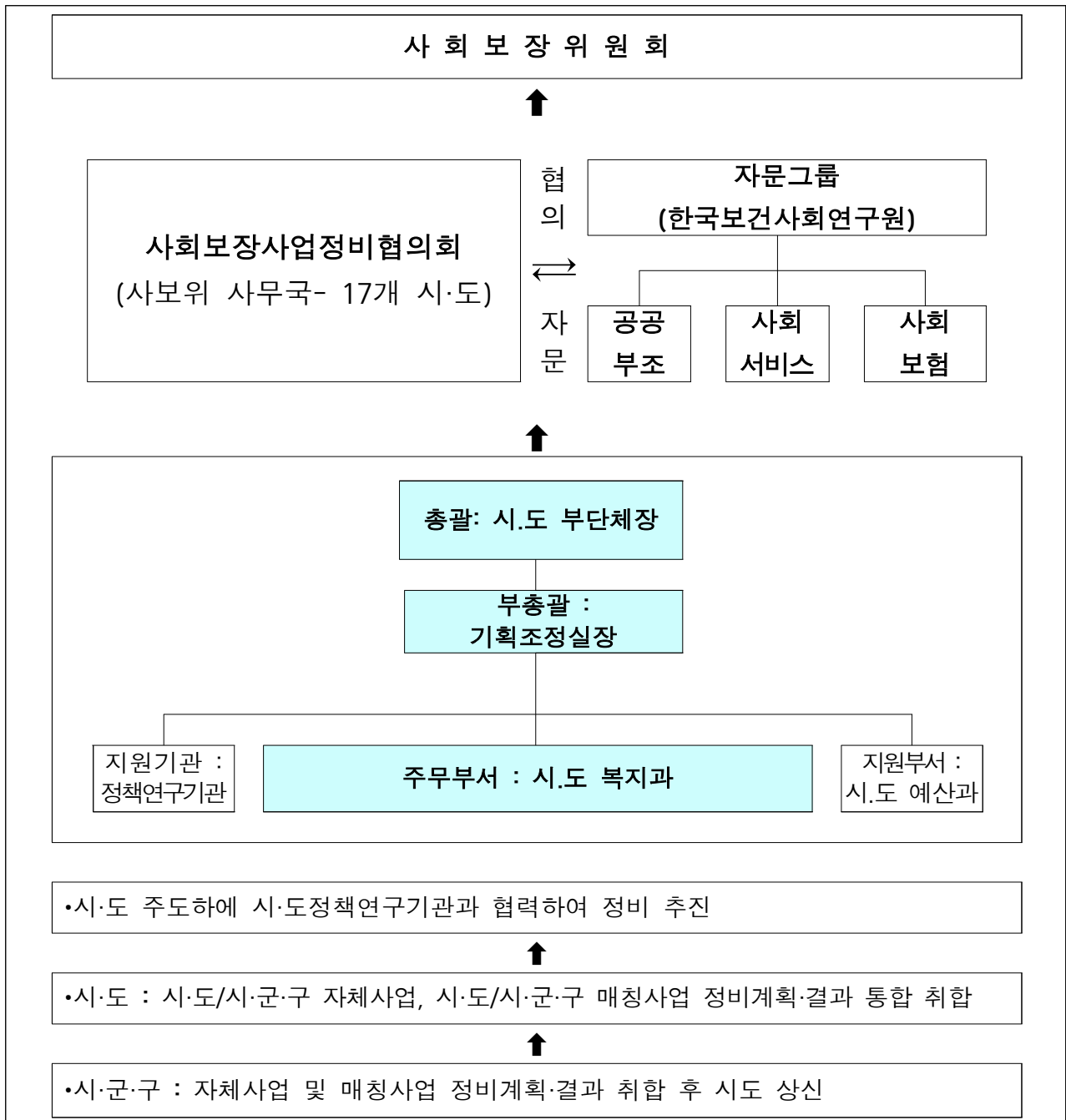
○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대책단*」을 통한 점검 실시

* (단장) 국무조정실장, (간사) 기재부, 복지부, 행자부 차관, (구성) 국토부 차관 등 15개 부처

○ 복지부, 행자부 등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평가에 사회보장사업
정비실적을 반영

* (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행자부) 지자체 합동평가

<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체계 >



Ⅲ.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추진 일정
○ 시.도별 정비추진단 구성현황 제출	'15.8.21(금)
○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권역별 설명회 개최	'15.9월 초
○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시.도별 간담회 개최	'15.9월 말~10월 초
○ 시.도별 정비계획안 제출	'15.9.25(금)
○ 시.도별 정비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보고	'15.10월 초
○ 정비결과 제출(1차)	'15.11.27(금)
○ 지자체 정비결과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15.12월
○ 정비결과 제출(2차)	'16.1.15(금)

* 정비계획 및 결과 제출 등은 공문으로 송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보사연의 정비 관련 컨설팅은 정비 추진 기간 중 지속 실시

IV. 행정 사항

① (제출자료) 시·도 책임하에 관할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 유사·중복사업 정비 관련 제출자료 ＞

구 분		제출일자	제출처	제출방식	제출양식
추진단 구성현황		‘15.8.21(금)	보건복지부 사보위 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공문제출	붙임2 참조
정비계획 (신규사업 포함)		‘15.9.25(금)			별도송부 (시·도 담당자) * 동일양식 활용
정비결과 (신규사업 포함)	1차	‘15.11.27(금)			
	2차	‘16.1.15(금)			

② (연락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관련 컨설팅 요청, 간담회 개최 등 문의사항은 보사연에 설치된 사회보장정비협의회 자문그룹으로 연락

○ 시·도에서 시·군·구 문의사항을 취합하여 문의

＜ 자문그룹 연락처 ＞

구분	성명	연락처	이메일
보사연	정홍원 연구위원	044-287-8217	sungelim@kihasa.re.kr
	임성은 전문연구원	044-287-8274	
사보위 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서승완 주무관	02-6020-3335	ssw73@korea.kr

별첨3. 대전/충남 사회보장사업 정비목록

대전광역시 복지정책 중 정비대상 사업목록(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명	사업분류 세부목적	대상	내용	시도 예산	총 예산
동 구	저소득주민주원사업	에너지(난방) 지원	공공임대아파트단내 내 판암3단지아파트, 판암4단지아파트, 산내주공아파트	공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납부		6
동 구	한부모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중학교 입학 자녀	입학축하금		10
유성구	노인일거리 창출	노인 일자리	유성구노인회지회 및 공동작업장 참여 경로당 어르신	노인일거리 사업 및 공동작업장 시행 안내		21
유성구	다문화가족지원	다 문 화 / 새 터 민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흥패션, 리본공예, 가족상담, 자조모임 결성, 자원봉사자와 결연(멘토링) 등, 취업컨설팅 및 취업알선, 바리스타 교육, 복지관내 카페운영		15
유성구	여성사회참여확대 (저소득자녀지원)	학습 지원(공부방)	한부모가족 자녀 및 저소득층자녀	여름방학 특기 적성 교육 실시		5
유성구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 운영(2개소)	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 운영		100
중 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출산장려 지원	관내1년 계속 거주 등록장애인	장애 1~2급: 100만원 장애 3~4급: 70만원 장애 5~6급: 30만원 (쌍생아 이상 50%가산) 국시비사업 중복지급 불가		10
대전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지원	어린이집재직보육교사	월 7만원 / 인	7,467	7,467
	셋째아보육료	출산장려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만3~5세)	3.8만원~5.4만원 차등지원	480	960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조교사 수당	보육교사 지원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형 지정 어린이집	연 2회 약 500만원/ 시설당	510	1,020
	어린이집 보조교사 파견사업	보육교사 지원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보호자 입원, 상사등으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36개월 미만의 셋째아 이상 아동	보육도우미 일 5만원/ 인 가정양육도우미 일 4만 5천원/ 인	211	422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2~3급 중증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여성장애인	산후조리, 육아, 가사 도우미파견	138	138
	영유아보육센터 운영	아동 돌봄 지원	일시 긴급보호 필요아동 (부모의 사망, 가출, 질병 등) 및 영유아와 그 부모 및 보호자	긴급보호프로그램, 상담지원프로그램, 보육지원프로그램	38	76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사업	상담멘토링-심리정서 지원	만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친조부모, 8촌 이내 친인척에 의한 양육자	아동양육보조금 : 12만원/인·월	13	1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지원	거주 장애인 가족	상담 사례 관리사업, 권리 옹호 사업, 장애인권 개선사업	412	412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독거 및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640명 (학교, 복지시설을 연중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 전신마비로 홀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 중복장애가 있는 자, 8대 희귀난치성질환자)	활동보조(가사지원, 병원방문 동행 등)	3,611	5,159
저소득주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월1만원미만의세대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세대-만65세이상노인이세대주인세대-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의거등록된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의규정에의한 국가유공자가거주하는세대-한부모가족세대-조손세대-소년·소녀가장세대	건강보험료 : 월 1만원 미만	516	737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입소료 1회/ 9만원, 현장학습비 분기당 5만원/ 1인	240	240
지자체 급여지원	수당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인연금수급자	월 2만원 추가	912	912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및 월동비 지원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 : 연 3.8만원/세대 -교육급여 초등학생 : 부교재비 연 3.8만원 중학생 : 부교재비 연 3.8만원/학용품비 연 5.2만원 고교생 : 수업료/입학금, 교과서대 연 12.9만원/학용품비 연 5.2만원	148	211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5개소)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관내 등록 장애인	수화통역 및 수화 교육 사업	1,018	1,018
청소년 공부방 운영	학습 지원 (공부방 포함)	저소득가정 청소년	산성 청소년 공부방 : 학습지도, 학습공간제공, 특기적성 교육, 문화체험 활동, 지역 연계 활동 등	70	140
한부모가족 지원 (자녀생활교육비, 초중고입학생, 교구교재비지원, 월동비지원)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보호를받고있는저소득 한부모가족또는자녀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비 : 연 5만원/인 -한부모 자녀생활 교육비 : 연 12만원/인 - 한부모가족 월동비 : 연 22만원/인	565	1,130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저소득 가정의 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가사지원, 육아지원, 산후조리 등		4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지원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105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지원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운영비 지원		95
					16,349	20,370

충청남도 복지정책 중 정비대상 사업목록(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명	사업분류 세부목적	대상	내용	시도 예산	총 예산
계룡시	노인일자리확충사업(자체)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수급권자중만65세이상노인일자리 사업참여조건에부합하는자(205명)	-스쿨존교통안전사업: 초등학교 교통 안전관리 -환경정비사업: 관내 거리·공원 청소	176	
계룡시	다문화가정 자녀보조학습비 지원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관내 다문화가정의 초, 중, 고생 자녀	연 60만원/인	12	
계룡시	장수수당	장수수당	관내거주만80세이상노인	월 2만원	179	
계룡시	저소득층 긴급지원(행복의 디딤돌 사업)	긴급구호 지원	최저생계비170%이내차상위계층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교육비, 의료비 등	30	
공주시	국제결혼가정 지원(온누리안 가족쉼터 운영)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이어려운산간또는 오지마을거주결혼이민자	방문상담, 요리교실, 가족문화탐방	10	
공주시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관내초등학교에재학중인다문화가정자녀	다문화가정초등학생교육지원내용:다문화가정을위한꿈이고학교운영, 다사 량봉사단운영,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이해교육연수운영등	20	
공주시	방과후학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	공주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방과후활성화프로그램	75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생활자금 대출	-생계가 곤란한자 중 근로능력이 강하고 자활의욕이 있는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를 받아 자활에 도움이 되어, 추후 상 환능력이 인정되는 자	-영세 상행위를 위한 상업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 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영농 및 축산 자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500만원 ~ 1,000 만원	70	
공주시	자체교육복지 지원	사례관리 및 복지행정지원	관내저소득초등학생	가정- 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구축을 통한 교육, 문화, 복지 수 준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105	
공주시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생활비용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교육비: 월 10만원/인	20	

금산군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시설 개선	-고령자 65세 이상 -장애인(지체, 뇌병 변, 시각장애 등록 장애인)	화장실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600만원 이내/세대	18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 안정자금 운영	생활자금 대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다응용도에자 금을사용하고자하는자-상업자금, 생계자금, 전 세금등, 영농자금, 기타사업자금	1,000만원	358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운영	건강보험료 지원	군내주민등록을둔지역가입자로보험료월1만 원미만인65세이상노인, 장애인세대	보험료	45	
금산군	노인생활증진(장수수당)	장수수당	관내1년이상거주한만85세이상노인	월 3만원	342	
금산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에너지(난방)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비, 자녀학습지원비,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금 지원	96	
금산군	주택개량사업	주거자금 대출	-공역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150㎡로 단독주택 신축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최대 5,000만원(3%, 5년거치, 15년 상환)	500	
금산군	지붕개량사업	주택시설 개선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신청자	최대 350만원	1,000	
논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생활자금 대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근로능력및자활의지 가있는사람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자금-영세 상행위를위한상업자금-천재지변, 기타재난 을당한사람에대한생계자금-무주택자에대한 전세금또는입주보증금-영농및축산자금-기 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자금	1,000만원/세대(3%,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761	
논산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로보험료월1만원미만65세이상노 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10	
당진시	장수수당지원	장수수당	관내에거주하고있는85세이상노인	85세이상 월 2만원 100세이상 월 10만원	456	
보령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방문교육사업 지원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관내거주하는입국초기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지원(한국어교육 및 생활서비스 교육)	22	
보령시	사랑의 집짓기 사업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이열악한저소득가구	조립식집짓기	40	
보령시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	주거비 지원	세대주가등록장애인인월세거주장애인가구	3.5만원/세대	210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	장수수당	관내주소를둔80세이상어르신	월2만원	1,104	
보령시	재해구호(보조)	재해 구호 및 보상	주택의전파, 반파, 침수등과인명피해등을당 한이재민및재해로인하여피해가예상되어대	임시주거시설,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활필수품, 의료서비 스,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3	

			피한일시대피자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관내주소를둔지역가입자로보험료월1만원 미만인65세이상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 공자세대	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	50	
보령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지원	여가/문화활동 지원(아동청소년)	관내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11	
보령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학습 지원(공부방 포함)	청소년	청소년 학습공간 제공 및 학습지원	13	
보령시	행복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18	
부여군	국제결혼가정지원 (자녀 입학금지원)	학비(등록금-입학 금) 지원	관내국제결혼가정자녀중만25세이하의자녀	입학시 1회 10만원(초), 20만원(중), 30만원(고), 50만원(대)/ 인	10	
부여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추가지원	장례 지원/ 묘비 정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는 세 대	장제비 25만원	45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원	장수수당	관내주소를둔만85세이상어르신	85세-99세: 월 3만원 만100세 이상:월 10만원	828	
부여군	장애인자녀 및 장애인학생 학습지지원 사업	장애인 교육 지원	관내 등록장애인의 18세 미만 자녀 및 장 애인 학생	월 3만 5천원/ 인	32	
부여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관내거주하는보험료월1만원미만인저소득65 세이상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66	
서산시	건강가정 구현 사업	가족여성 복지 프로그램 지원	한부모, 조손, 고부, 부부 등	가족기능강화, 여성이 행복한 즐거운 가정만들기, 가족공감 문화나눔 프로그램, 건강가정 증진 프로그램	20	
서산시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관내주소를두고거주하는지역가입자로보험 료월1만원미만인65세이상노인, 장애인, 한부 모, 중증질환자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70	
서산시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폭력피해- 예방지원	모든 시민	성바로 알기 릴레이 교육	3	
서산시	이재민 응급구호	재해 구호 및 보상	재해로인하여주택침수및주택반파이상피해 를입은이재민	구호물자, 쌀, 김치 등 부식품, 1일 7천원 (1인)	5	
서산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장수수당	관내1년이상거주한만85세이상노인	월 5만원	1,380	
서산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가사돌봄요양 서비스(비용) 지원	-일반찬서비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차상위, 저소득가정(110명) -이동목욕서비 스: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중증 은 제외)(83명) -사랑의 빨래방, 이.미용	- 일반찬서비스: 월 2회 - 이동목욕서비스: 대상자를 방문하여 이동목 욕서비스(3월~12월) - 사랑의 빨래방: 수거하여 세탁 및 건조 전달 - 이.미용 서비스: 수시	109	

			서비스: 저소득어르신 및 장애인(각 151세대, 52명)			
서천군	모자원 프로그램 지원	거주시설 운영 및 입소자 지원	한부모가족시설1개소	시설입소 및 상담치료	6	
서천군	민간.가정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사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	월 5만원/ 인	36	
서천군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2	
서천군	소외계층 지원사업	에너지(난방) 지원	저소득층	연탄 지원	2	
서천군	이재민 구호	재해 구호 및 보상	재해로인하여주택침수및주택반파이상피해를입은이재민	응급구호, 취사구호, 개별구호(생수, 쌀, 부식류 등)세트, 1인 1일 7천원(7일 이내)	3	
아산시	글로벌영재아동사업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다문화가정의 자녀	가족지원, 기초교육, 문화지원, 정서발달	80	
아산시	노인장수수당 지원	장수수당	관내6개월이상거주한만85세이상노인	월 2만원	672	
아산시	다문화가족 및 조손가정 멘토링 사업	상담멘토링-심리정서지원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가족캠프를 통해 멘토-멘티로서 좀더 폭넓은 문화 공유	10	
아산시	시각장애인 재활학습지원	장애인 교육 지원	관내 등록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재활학습, 사회적응프로그램	31	
아산시	여성장애인 육아 및 출산보조	출산장려 지원	육아보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 계층재가중증여성장애인출산보조:관내6개월계속거주등록(1~6급)장애인	중증장애인육아보조월10만출산보조:장애1~2급, 100만원장애3~6급, 70만원	18	
아산시	조손가족 지원	수당 지원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월 5만원/인	6	
예산군	노인복지지원	노인 일자리	노인회분회	노인회분회별일거리제공	3	
예산군	다문화가족 자녀입학금 지원	학비(등록금-입학금) 지원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20	
예산군	여성장애인출산지원	출산장려 지원	출산 여성장애인	장애 1~2급: 100만원 장애 3~4급: 70만원 장애 5~6급: 50만원	3	
예산군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시설 개선	주거환경개선이필요한통합사례관리가구,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등-단자활집수리,정부지원의집수리지원받은가구는지원대상에서제외(단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제외함)	도배, 장판, 지붕, 보일러, 단열, 급수, 창호등자활집수리사업범위내지원, 위생, 청소및방역등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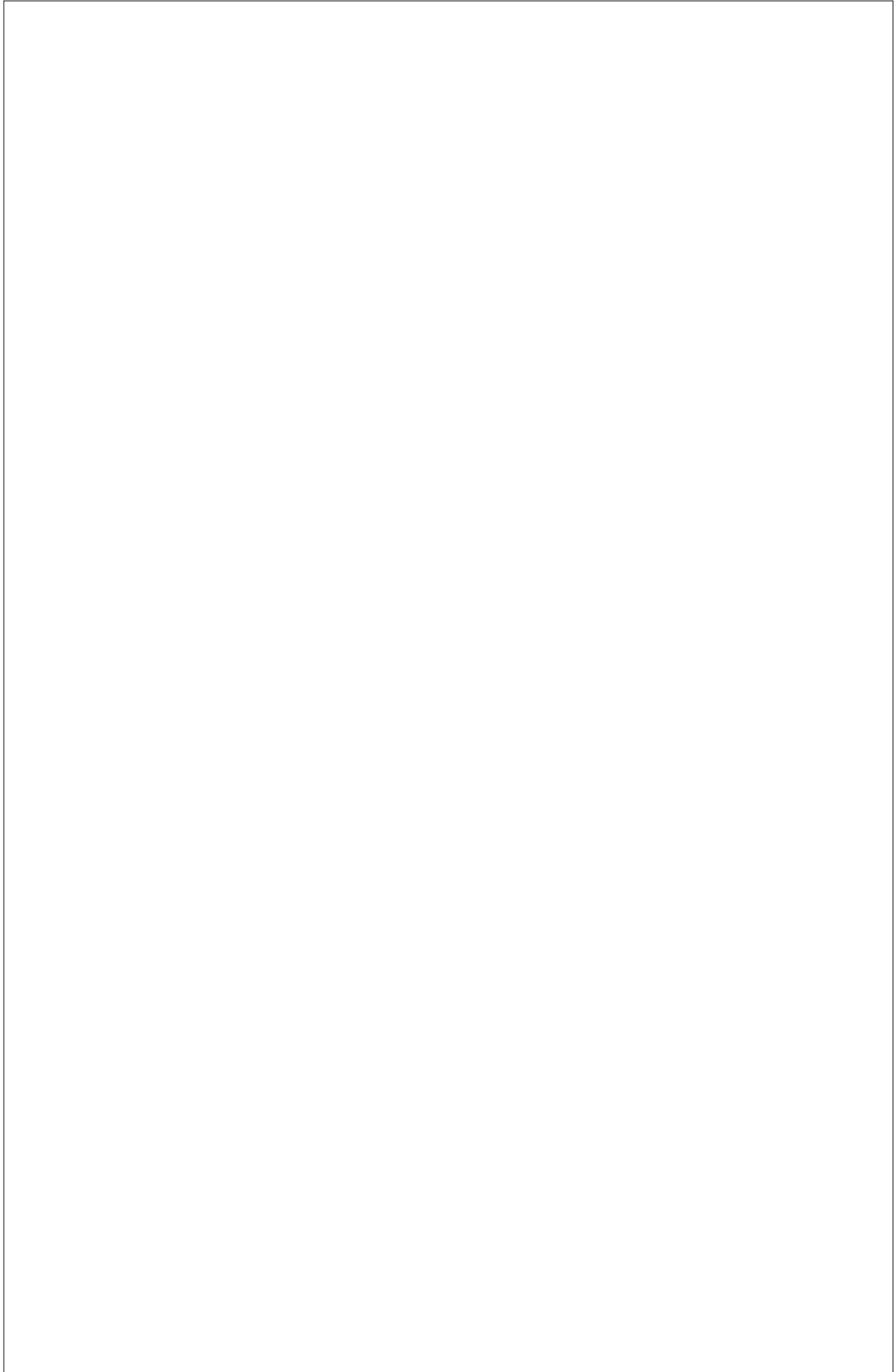
천안시	결혼이민자 한국어소그룹 교육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한국어교육지원	18	
천안시	어린이성폭력예방 성인형극 운영	폭력피해-예방지원	도내3개시(천안, 공주, 계룡)어린이집및초등학교저학년	순회방문하여 성인형극을 통한 어린이 성교육을 실시	18	
천안시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출산장려 지원	관내6개월계속거주등록장애인및여성장애인 유고시친권자	장애 1~2급: 150만원 장애 3~4급: 120만원 장애 5~6급: 100만원	131	
천안시	육아사랑방운영	아동 돌봄 지원	관내 영유아 및 부모	도담도담놀이터운영, 부모카페운영(상담및정보교류)	45	
천안시	장수수당 지원	장수수당	관내1년이상거주한만85세이상노인	85세이상:월3만원100세이상:월10만원	720	
천안시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로보험료월1만3천원이하저소득 65세이상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조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243	
천안시	조손가정 수당지원	수당 지원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가정위탁세대는 제외)	월 3만원	31	
청양군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폭력피해-예방지원	가정폭력피해자, 가해자등	가정폭력 상담, 피해자 보호, 예방사업	47	
청양군	다문화가족자녀학습비지원	교육비(학습관련)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만5세~ 초등학교 6학년	월 3만 5천원/인	40	
청양군	다문화가족정착지원	다문화/새터민 정착 지원	관내2년이상거주35세이상농촌총각으로국제 결혼후10개월이상거주자	1인 300만원	30	
청양군	사랑의 이동목욕사업	위생지원	노령, 장애, 질환등으로거동이불편한자(장기 요양등급미등급자)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 찾아가는 목욕서비스제공	45	
청양군	수급자,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주택시설 개선	기초생활수급자및저소득장애인가구	-대상가구의 지붕수리 및 도배장판, 화장실 설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00만원~600만원/세대	60	
청양군	수급자생활안정기금	생활자금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의욕이 강한자 중 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용자대상에 한함	1,000만원/세대(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877	



토론1.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사회보장사업관련 -
정비지침 내용 요약 및 대전시 진행상황

[김동선 대전광역시청 복지정책과장]



- 목 차 -

I . 유사 · 중복사업 정비지침 내용 요약	1
1. 정비방향	1
2. 정비대상	2
3. 정비대상 사업군	2
4. 유사.중복 정비기준	3
5. 시.도별 조치사항	4
II . 유사 · 중복사업관련 우리시 진행상황	7
1. 그동안 추진사항	7
2. 부서 검토결과(잠정)	7
3. 향후 추진계획	8
III . 유사 · 중복 사회보장사업 목록	9

I.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 내용 요약

기 본 방 향

-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되, 유사·중복성이 명확한 사업 등은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 추진
 - * (구성) 사보위 사무국, 17개 시·도(단장: 부단체장), 관련부처, 보사연 등
- ◇ 금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 * 동 재원을 활용한 사회보장사업의 신설·변경 협의절차 간소화

1

정비 방향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되, 유사·중복성이 명확한 사업 등은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 추진
 - (통·폐합)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 중앙정부 신규사업(맞춤형 복지)과 중복사업 등
 - (효율화)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 종류, 수준, 전달체계 등 정비
- 금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지자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 중앙-지방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 추진
 - * 협의회 지원을 위해 보사연 주관으로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시·도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비결과를 사후검증

2

정비 대상

- '15.4~7월 실태조사(복지부·보사연) 결과 파악된, 지자체에서 국고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 (유사·중복) 연구용역 결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 (자체발굴) 지자체에서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3

정비대상 사업군

/ 19개 사업 14,758백만원

- ① 사회보험 관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1개 사업, 361백만원)
 -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
-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0개 사업)
 - 중앙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기초연금)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유사 성격의 현금성 급여
-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맞춤형 복지)과 중복 되는 사업(2개 사업, 669백만원)
 - 기초수급자 지원대책이 맞춤형 급여체제로 변경('15.7월)됨에 따라 동 제도와 중복 될 여지가 있는 지자체 사업
-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성격의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16개 사업, 13,728백만원)

4

유사·중복 정비기준

-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별로 정비기준에 따라 검토한 뒤, **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정비**

구 분	정비기준	공통기준	
사회보험 (1건, 361 백만원)	■ 5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업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추가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		
공공부조 (4건, 1,821 백만원)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도입('15.7)에 따라 기존 지자체 사업과의 상호보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추진 권고	제도의 통일성, 지역간 형평성	■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부적합하거나, 지역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 하는 추가급여 지급 및 대상자 확대는 원칙적으로 정비
		유사·중복, 누락, 편중	■ 동일 수급자를 위한 유사 성격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정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 기존 전달체계를 우선 활용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강구
사회 서비스 (14건, 12,576 백만원)	■ 사회서비스 급여 대상자 확대는 가능 ■ 공급기관보다는 수요자 지향 서비스 권고 ■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차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충	지자체별 여건	■ 지자체별 재정 상황, 인구 구조 등 지방자치제도 실시 20년간 변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정비
		비용/효과	■ 재정투입 규모에 비해 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정비 권고
		기 타	■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혜자의 근로의욕이나 자활의지 제고에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은 지자체 자체 점검을 통해 급여/서비스 방식 정비 권고 ■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개념으로 전환 검토

- 사회 보험 :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 부조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 복지 등의 분야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 및 돌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5

시·도별 조치사항

① 추진단 구성 및 정비 계획수립

- 시·도별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
/ 15명(단장 : 정무부시장)

* 사보위 사무국, 시·도별 추진단,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업을 통해 정비 추진

- 정비추진단 책임하에 정비대상 사업 등을 검토한 뒤 시·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보위 사무국에 제출('15.9.25) / 미 제출
 - 각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정비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방향, 대상사업 선정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의 자문그룹에 컨설팅 등 요청

< 사업군별 정비유형 / 19건, 14,758백만원 >

사 업 군	정비유형	비고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1건, 361백만원	폐지 권고	즉시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 추진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 (맞춤형 급여제도) / 2건, 669백만원	사업내용 변경, 타사업과 통폐합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변경하 거나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16건, 13,728백만원)		
⑤ 자체발굴 사업	폐지, 변경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추진

② 정비추진

- 마련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로 '16년 예산안 반영, 조례개정 등 정비추진

* 단계적 폐지사업은 정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

- 사회보장사업정비협의회 협업 실시(보사연 주관)

- (설명회) 9월초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도와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비방향, 정비요령 등 설명예정 / 9. 4.
- (간담회) 시·도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비추진시 발생하는 애로 사항 등의 해소를 위해 컨설팅 등 제공예정 / 11. 2.

③ 정비결과 제출

- 제출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사보위 사무국에 제출

- (1차)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15.11.27)
- (2차) 지방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16.1.15)

④ 신규사업 발굴

-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함께, 절감된 재원을 사각지대 발굴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재투자 권장

-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개선한 타 지자체 사례 참고를 위해 보사연에 설치될 사회보장정비협의회 자문그룹과 협의 요망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의 신설·변경 협의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 / 사회보장사업 신설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 협의사항

* 정비계획 제출시 신규사업 리스트도 제출

5 결과점검 및 향후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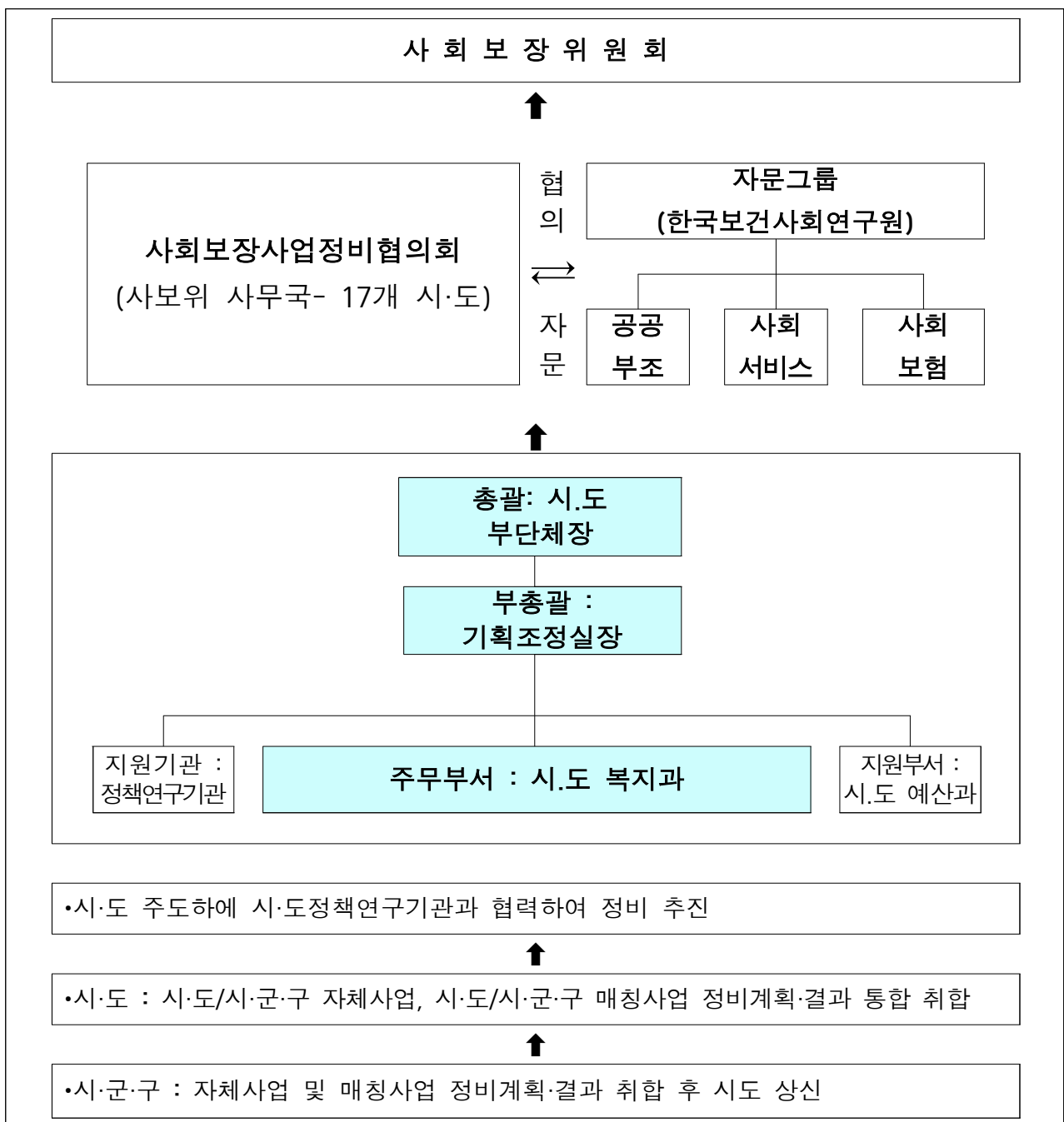
○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대책단*」을 통한 점검 실시

* (단장) 국무조정실장, (간사) 기재부, 복지부, 행자부 차관, (구성) 국토부 차관 등 15개 부처

○ 복지부, 행자부 등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평가에 사회보장사업 정비실적을 반영

* (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행자부) 지자체 합동평가

<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체계 >



Ⅱ. 유사·중복사업 정비관련 우리시 진행상황

1 그동안 추진사항

-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자치구 통보 : 2015.8.20
-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市 관련부서 직원공람 : 2015.8.20
- 市 정비추진단 구성(15명) : 2015.8.25
 - 해당부서 담당(사무관)회의, 담당자 회의 개최 / 정비지침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라 각 부서별로 검토 중
 - 역할 : 각 부서별로 검토.시행, 복지정책과에서는 취합 보고

2 부서 검토결과(잠정) / 19건, 14,758백만원

- 정비지침과 무관하게 정비 : 2건, 132백만원
 - 차상위 계층 교육급여 및 월동비 지원(104백만원) / 교육급여와 중복
 - 영유아보육센터 운영(28 ")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통합
- 타 사업과 통합 : 2건, 947백만원 / 혜택 변동사항 없음
 - 지자체 급여지원(912백만원) / 장애인연금에 포함 지급
 - 청소년공부방 운영(35 ") / 사회복지관 프로그램과 통합
- 정비 비대상사업 : 6건, 2,042백만원 / 유사·중복사업 아님
 -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1,018백만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105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95 ")
 - 한부모가족지원(자녀생활 교육비등 지원) / 565 "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조교사 수당(255 ")
 -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사업 / 4 " (국.시.구비 매칭사업 / 70:15:15)

- 사업내용 변경 : 5건, 1,071백만원 / 혜택 변동사항 없음(중복사업 배제)
 - 셋째아 보육료(240백만원)
 -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 지원(179 “) / 2건으로 관리 중
 - 중앙 중복사업(2건)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지원(412 “)
 - 저소득층아동 입소료.현장학습비 지원(240 “)
- 국비사업량 증가시 까지 운영 : 2건, 2,738백만원
 - 어린이 보조교사 파견사업(210백만원)
 - 장애인활동 추가지원(2,528 “)
- 지속 운영 : 2건, 7,828백만원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361백만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7,467 “)

3

향후 추진계획

- 해당 부서별로 사업별 정비계획 검토 : 2015.10월 ~
- 해당부서 검토결과(잠정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업무협약 : 2015.11.2.
 - 정비 비대상사업 분류, 사업내용 변경 지속추진 및 통.폐합 추진 적정여부 등에 대해 업무협약
- 정비결과 제출 : 市 → 사회보장위원회
 - (1차)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15.11.27)
 - (2차) 지방의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제출('16.1.15)

Ⅲ.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목록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유사·중복 중앙사업	비고
계	19개 사업		14,758		
1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및 월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700명(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지원단가 : 부교재비 : 초중학생 연 38,700원 학용품비 : 중고학생 연 52,600원 월동대책비 : 연 1회(11월) 40천원 지급 	104	교육급여	
2	영유아보육 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5개소(시 1, 동구·중구·유성·대덕 각 1) 지원단가 : 시 9,120천원, 구 9,600천원/개소당 사업내용 : 6세 미만 아동 일시보호(보호자 부재시) 	28	육아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3	지자체 급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3,800명(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지원기준 : 1~2급 장애인 지원단가 : 월 20천원/인 	912	장애인연금	
4	청소년 공부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5개소(중구 1, 서구 2, 유성구 2) 지원기준 : 시설 66㎡ 이상 및 열람석 30석 이상, 행정원 1명 및 일일자원봉사자 1~2인 배치 지원단가 : 7,000천원 / 개소당 	35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5	어린이집 보조교사 파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65명(어린이집 대체교사, 영유아보육지원 센터 보육도우미) * 국비지원 대체교사 20명 지원기준 : 교육, 출산, 휴가 등으로 대체교사 필요시 지원단가 : 월 500천원(1일 50천원, 8시간 근무) 	210	보육돌봄 서비스 대체교사 인건비	
6	장애인활동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1,173명(1~2급 등록장애인) 지원기준 : 국비지원으로 활동보조 서비스가 부족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 수급 장애인 - 2급 : 발달 장애인(지적, 자폐성, 뇌병변) 지원단가 : 월 171 ~ 684천원(개인별 차등지급) * 국비 최대 391시간+시비 54시간 / 월 	2,528	장애인활동 지원	
7	셋째아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800명(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셋째아 이상) 지원기준 : 정부지원금(220천원) 외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단가(민간) : 45천원(3세), 28천원(4~5세) (가정) : 49천원(3~5세) 	240	누리과정 지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유사·중복 중앙사업	비고
8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60명(장애인복지관 5개소에서 운영) 지원기준 : 임신, 출산, 육아, 활동보조 등에 도우미 파견 지원단가 : 1일 50천원(8시간 근무) 	179	장애인 활동지 원	
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60명(장애인복지관 5개소에서 운영) 지원기준 : 임신, 출산, 육아, 활동보조 등에 도우미 파견 지원단가 : 1일 50천원(8시간 근무) 	중복	산모신생아 건 강관리 지원사 업	
10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2개소(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지원내용 : 인건비 251백만원, 운영비 161백만원 사업내용 : 사례관리, 역량강화, 여가지원, 가족상담 등 	412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 업	
11	저소득층아동 입소료·현장 학습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1,100명(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 아동) 지원기준 : 어린이집 입소 저소득·장애아 아동 지원단가 : 입소료(90천원/1회), 현장학습비(50천원/분기) 	240	누리과정 지원	
12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5개소(수화통역센터) 지원내용 : 종사자(30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내용 : 수화교실, 수화통역, 전화통역 등 	1,018	통신중계 서비 스 제공	
13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 센 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3개소(중구 1, 서구 1, 유성 1) / 중증장애인 1~2급 지원단가 : 개소 당 35,000천원 사업내용 :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 국비사업과 지원대상 기관과 수혜 지역이 다름 	105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 사업	
1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3개소(한밭센터 2개소, 보문센터 1개소), 정원 8명 * 아파트 : 46㎡, 56㎡, 82㎡ / 생활시설 및 재가중증장애인중 희망자 지원내용 : 한밭센터 2개소 57,000천원, 보문센터 38,000천원 사업내용 :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생활 체험, 탈 시설 유도 	95	”	
15	한부모가족지 원(자녀생활 교육비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1,100명(한부모 및 조손가족 자녀) 지원기준 :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단가 : 자녀 교육비 1인당 연 120천원,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연 50천원, 월동비 세대당 연 220천원 	565	교육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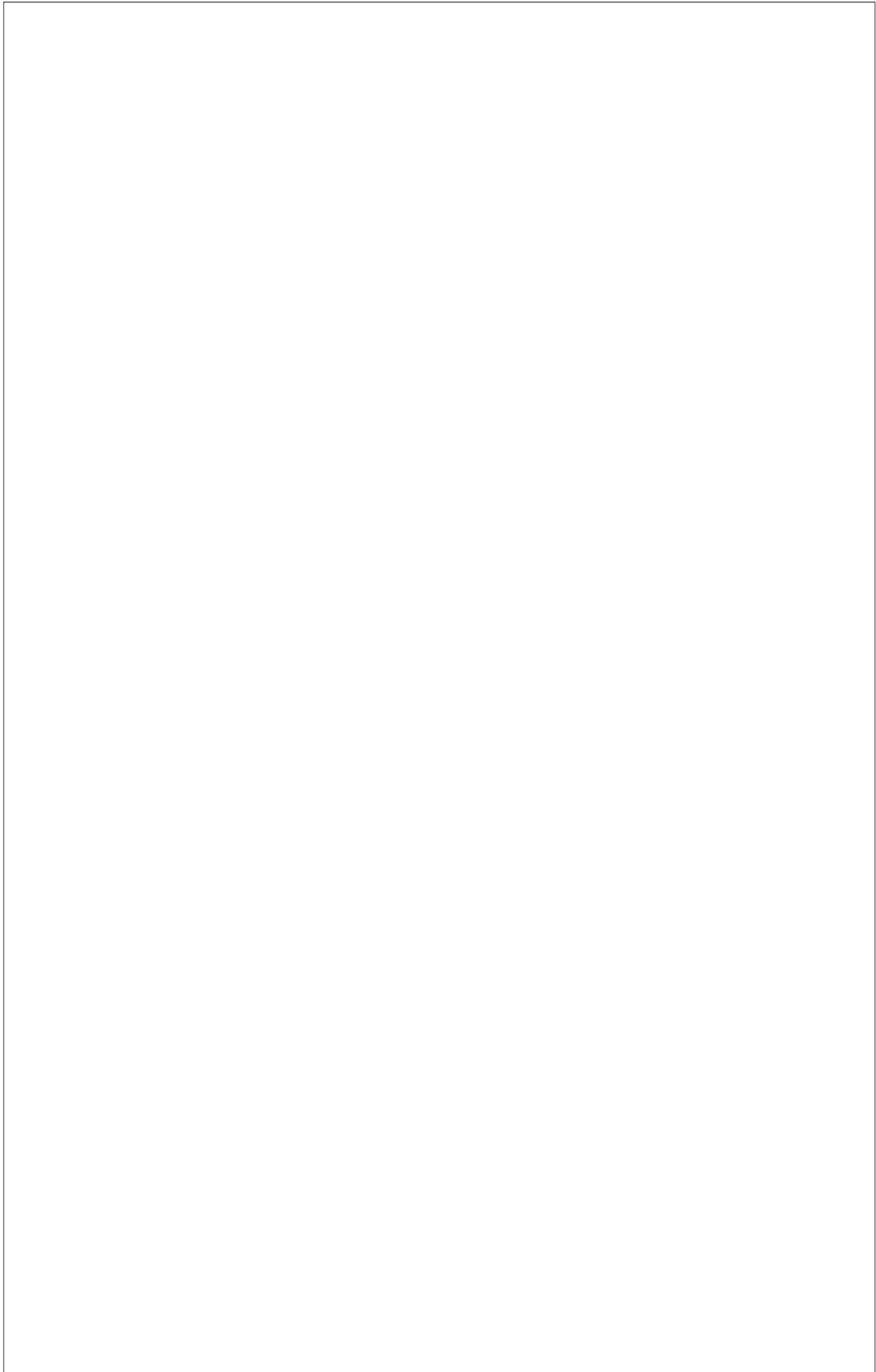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유사·중복 중앙사업	비고
16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조교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34명(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운영) 지원기준 : 야간·24시간 어린이집 / 개소당 1명 지원단가 : 1일 50천원 / 연 300일 미만 	255	어린이집 지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17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14명(입양·가정위탁 아동) 지원기준 : 월 200천원 이내 지원단가 : 심리상담 4회 이내 총 200천원, 교통비 월 20천원 이내 	4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8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5,100세대(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중 ① 만 65세 이상 세대주 세대 ② 장애인세대 ③ 국가유공자세대 ④ 한부모가족 및 조손세대 ⑥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기준 : 국민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361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 보험	
19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8,890명(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비 상근 제외) 지원계획 : 연차적으로 상향 지원 최고 10만원 / 2018년까지(약속사업) 지원단가 : 월 7만원 / 인 - 5만원('14) → 7만원('15) → 8만원('16) → 9만원('16) 	7,467	어린이집 지원(교사근무 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토론2.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윤혜주 대전광역시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사무처장]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대전광역시수화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사무처장

윤 혜 주

1. 수화통역센터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1997년에 MBC방송국을 통해 한국 최초의 자막방송이 시작되었고, 그 이듬해부터 16개 시도에 수화통역센터가 개소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없었던 농아인계에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대전시의 경우 역시 1998년 대전수화통역센터를 개소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였고, 1999년에는 농아인의 날이 제정되었다. 그 행사에 참여했던 전국의 농아인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상영되었던 최초로 한글 자막이 제공된 영화인 “쉬리”를 보면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방송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시작된 자막서비스와 함께 농아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통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농아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전시는 2009년 첫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5개 구에 수화통역센터를 개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왔던 농인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소통이 가능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수화통역센터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화통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하지만 농인들이 겪는 모든 문제가 단순한 통역으로 해결 되지 않으며, 이는 전생애에 걸친 문제들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수화통역센터와 손말이음센터 무엇이 다른가?

구분	수화통역센터	손말이음센터
운영주체	한국농아인협회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설립목적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함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전화 등 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용대상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기타 청각.언어장애인의 필요에 의한 의사소통에 지원	1. 통신을 통하여 소통이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인과 통신하고자 하는 비장애인
제공서비스	*청각장애인 대면, 직접서비스 중심 1.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2.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 취업, 관공서 이용), 가족문제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 서비스 3. 전문수화통역서비스 세미나, 강연, 기술통역 및 학습권(학원, 학교 공무원 시험 등) 지원 통역서비스 4.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화교육 및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통신을 통한 간접서비스 중심 1. 통신을 통한 문자 중계서비스 문자로 통화 내용을 입력하면 중계사가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주고,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중계사가 다시 장애인에게 문자로 전달 2. 통신을 통한 영상중계서비스 영상을 통하여 중계사에게 수화로 통화내용을 전달하고 중계사는 이를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통화내용은 중계사가 다시 수화로 장애인에게 전달 3. 통신을 통한 언어장애인 서비스 언어장애인의 음성을 중계사가 듣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전달
필요성 및 한계점	- 제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직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 영상매체를 통한 전달체계로 감정 및 정서 전달이 어렵다. - 생활고로 인한 인터넷 환경이 영상기기 미소지 - 문맹 농인의 경우 문자서비스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 자연수화를 사용하는 경우 비수지신호전달에 한계가 있다.

수화통역센터는 말 그대로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수화통역은 농아인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여 통역을 의뢰하는 절차를 거쳐 대부분 면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바로 통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농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또 어떤 해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만큼 수화통역은 단순한 전달과정이 아닌 농아인의 전생애와 연결되어 전문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일이다.

다시 말해 농인들이 겪는 모든 문제가 단순한 통역으로만 해결되지 않으며 전 생애에 걸친 문제들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화통역센터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더 많은 역할들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직업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에 교육통역을 갔다가 기초학습(구구단, 곱셈, 나눗셈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농학생을 별도로 지도해야 하는 상황, 정신병원에 입원한 농아인의 통역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돌봐줄 가족이 없어 결국 농인을 돌보고 관리하는 상황, 밤늦은 시간에 갑작스런 응급상황으로 응급실에 통역을 갔다가 밤을 세서 농인을 케어해야만 하는 상황이나 가족이 없는 농인 부모의 장례식장에 통역을 갔다가 새벽까지 굶은 일을 다 하고 오는 일들은 상황만 조금씩 다를 뿐 전국의 모든 수화통역사들이 수없이 겪는 일이다.

또 다른 상황을 제시해 본다면 농아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중의 하나가 가족들이 장애인 혜택을 목적으로 장애당사자의 명의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휴대폰이 없는 농아인은 수화통역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간접서비스(손말이음센터) 전달체계만으로 의사소통지원이 가능한가?

의사소통이란 단순히 말이 오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속에 마음과 눈빛과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표정들이 담겨 있다.

수화통역사는 수많은 감정과 표정을 담아 농인에게 전달하고 농인은 수많은 감정과 표정을 수어를 통해 통역사에게 전달하고 통역사는 그 내용을 수화를 모르는 일반 청인에게 전달한다.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정확한 전달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그 복잡한 의사소통의 전달과정을 기계나 컴퓨터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늘어나는 것 같다. 농아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직접 접해 보지 않고서 하는 그러한 말들은 어불성설이며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참으로 오만한 생각에 불과한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손말이음센터의 한계점은 무엇이 있나?

첫째, 감정과 정서 지원의 한계가 있다.

둘째, 영상기기가 없거나 인터넷 미설치된 환경에서는 이용을 위한 접근에 제한이 있다.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공서 및 의료기관 등 설비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문맹 및 자연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의 경우 손말이음센터의 문자서비스 및 영상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넷째, 손말이음센터가 제공하는 일상생활 지원의 경우는 가능하나 병력 및 금융, 경제 등 사적 영역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밤이나 낮에도 짜장면이나 치킨 등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같을 때는 간접서비스지원을 통하여 해소될 것이다.

몇 해 전 전국이 농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도가니’로 인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급하게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복지계에서는 일명 ‘도가니 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 법이 제정된 지 5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사회보장정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화통역센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하려는 현 정부는 사회적 약자이며

듣지 못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여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농아인들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현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었다. 만약 수화통역센터를 정비하게 될 경우 전국의 천명이 넘는 수화통역사의 일자리와 대책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심어린 답변을 듣고 싶은 심정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양과 질이 있다. 지금 정부가 부르짖는 일자리 창출은 양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속빈 강정마냥 양적으로만 늘리는 일자리 창출은 수치로 보여주기 위해 급급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현재 자리잡은 정규직마저 시간제로 돌리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자리 창출인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향간에는 인건비를 줄이고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 활동보조인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농인들에게 지금까지의 서비스와는 다른 단순히 언어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4. 수화통역센터를 통한 직접서비스는 왜 필요한가?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화통역센터를 통한 직접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화통역 현장에는 방송, 법률, 경찰서, 의료, 상담, 교육 등 전문영역에서의 직접서비스의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법원통역이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조서를 받는 경우 전문통역사의 직접 개입을 통한 서비스가 필요하며, 의료통역의 경우 수술이나, 검사, 진단 등 손말이음센터를 통한 중계서비스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앞서 재차 거듭 강조하였듯이 수화통역이라는 것이 단지 기계적인 의사전달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농아인에게도 자신이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내용도 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이 조항을 근거로 “중앙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지역의 특색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중복 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정비지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496개 사업이 폐지되고, 9,99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대전시의 경우 204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비지침이 ‘교부금’을 볼모로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현재 수화통역센터의 경우 「수화통역센터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가 2013년 제정되어 시행중인 것을 감안하여 농아인의 원활한 일상 생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유사중복사업에서의 접근이 아닌 손말이음센터의 간접서비스와 수화통역센터를 통한 직접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병행되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